



신행정수도의 새로운 추진방향과 과제

육동일 (충남대 교수/신행정수도 건설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드디어 충청권의 민심이 폭발했다.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드문 일이다.

정치권에 의해 우롱당하고 현재에 의해 짓밟힌 지역의 자존심이 울분과 분노로 분출된 것이다. 중앙의 언론들은 충청권의 피맺힌 절규와 규탄의 몸부림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지역이기주의의 꾀으로 폄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위헌결정으로 촉발한 작금의 사태는 그 파장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및 향후의 정국구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만큼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번 사태로 초래되는 충청권의 직접적인 피해보다 우리 국가사회 전체가 겪어야 할 후유증이 훨씬 클 것이라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선 전체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더 이상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지고 말았다. 그동안 한국정치는 과잉·과대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했지만, 정치력은 과소·부재했기 때문에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의 정책적 판단마저 사법부의 판결에 맡겨버리는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한편, 서울중심주의·서울제일주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서울은 수도'라는 관습이 헌법적 규범이 되고 만 현재의 판결은 결국 '서울은 수도여야만 한다'는 뿌리깊은 관습적 편견과 우월의식을 함축하고 있음에 다름이 아니다. 중앙언론 소유자를 포함한 한중도 되지 않는 기득권자들의 주술에 대다수 수도권 주민들은 집단최면에 걸려있는 듯 싶다. 이 의식을 깨지 못하면 수도이전은 고사하고 국민통합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영원히 불가능하다.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역의 응어리진 감정과 결집된 힘을 민주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냉철한 이성과 지혜로 수습해법과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은 이 지역이 두 번 다시 피해와 상처를 받지않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위기시에는 더욱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난국수습의 해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 출발점으로 해법의 4원칙과 3단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난국수습의 원칙은 종합적·체계적·전략적·주체적이어야 한다. 종합적이라 함은 신행정수도의 중단은 국정과제로서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차질과 함께 충청지역에 엄청난 피해와 지역발전계획의 근본적인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땀질식 미봉책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또한 대전·충남·북 자치단체와 학계 및 시민단체들은 견고한 공조체제로 중구난방이 아닌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습책은 전략적이어야 한다. 생각같아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지속적 추진을 계속 강경하게 주장하여 그 뜻을 당장 관철시키고 싶은 것이 지역의 여론이다. 그러나 신행정수도의 지속적 추진에는 헌법적 제약, 수도권 반대 등 많은 걸림돌이 다시 추가되었기 때문에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수습 내용과 과정은 중앙정부가 아닌 충청권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원칙 하에 수습 1단계는 지역이 겪게 될 피해를 철저히 조사해서 보상하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연기·공주지역내 이주를 전제로 대토 마련을 위해 금융대출을 받았던 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2단계는 위헌판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 등의 헌법기관만을 제외한 다른 행정부처의 이전을 당초의 예정대로 추진토록 하는 것이다. 변칙적 수도이전이라는 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되나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로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 만일 정부가 이것마저 주저한다면 애초부터 신행정수도건설의 추진의지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적 합의를 걸쳐 신행정수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누구도 독단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포기하거나 중단시킬 수 없다. 그리고 3단계는 신행정수도의 합법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헌법개정, 국민투표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제반조치들을 치밀하게 모색해 두는 것이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향후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시 된만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독립상설기구를 설치해서 다루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 문제를 당리당략이나 선거의 지렛대로 보지말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현명하게 접근해 주길 바란다. 충청지역 주민들은 지혜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실추된 지역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